
2022년 호주 반부패 기구 신고심사 제도운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22. 12.



국민권익위원회
심 사 보 호 국

목 차

I . 출장 개요	1
II .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4
1. 한인변호사협회	4
2. 연방법원	5
3. 국세청	7
4. 금융불만위원회	8
5. 빅토리아주 부패방지위원회	10
6.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	11
7.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13
III . 시사점 및 성과	15
【붙임1】 한인변호사협회 회의록	19
【붙임2】 연방법원 회의록	21
【붙임3】 국세청 회의록	27
【붙임4】 금융불만위원회 회의록	36
【붙임5】 빅토리아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록	46
【붙임6】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 회의록	53
【붙임7】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록	57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청렴 선진국의 공익침해행위 조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반부패 정책 및 심사·보호·보상절차 개선 기반 마련
- 특히,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2 출장국 및 방문기관

- 출장국 : 호주(Australia)
- 호주는 국가청렴도지수(CPI) 상위권 국가로, 중상위권인 우리나라가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모델 국가
- 최근 집권정당 교체로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인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상호 정책협조 도모

※ 양국의 국가청렴도지수(CPI) 비교

	'18년	'19년	'20년
한국	45위(57점)	39위(59점)	33위(61점)
호주	13위(77점)	12위(77점)	11위(77점)

3 출장기간 및 출장자 명단

- 출장기간 : '22. 11. 12.(토) ~ 11. 19.(토), 7박 8일
- 출 장 자 : 박희정 공익심사팀장, 김인희 사무관, 김혜진 사무관

4 출장 세부일정

날 짜	위 치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1/13 (일)	시드니	-	· 인터뷰 질문 정리 및 국세 관련 공익 신고 관련 질의
11/14 (월)	시드니	한인변호사협회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질의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법절차 - 공익신고자 위한 사법상 지원제도 (국선변호인, 정부기관 보조참가 등)
		호주연방법원	· 신고자 보상 판결 질의 - 공익신고자 관련 재판 통계 및 판례 - 보호·보상 재판 시 주요 쟁점 - 연평균 보상, 금지명령 통계 - 최종 판결 전 가금지명령의 발령요건
11/15 (화)	시드니	호주 국세청	· 국세 관련 공익신고 관련 질의 - 국세 관련 공익신고 접수현황 - 자체 운영 중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1/16 (수)	멜버른	호주금융불만 위원회	· 금융 분야 공익신고 관련 질의 - 주요 신고접수 유형 - 민간분야로부터의 자료 확보방법 -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간 조정중재제도
11/17 (목)	멜버른	빅토리아주 부패방지위원회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 관련 질의 - 공익신고 통한 부패행위 적발사례 - 공직자인 내부 신고자 보호방안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1/18 (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	· 옴부즈만 업무 관련 질의 - '22년 NSW PID법(공익신고법) 개정사항 - 옴부즈만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분담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 관련 질의 - 공익신고 통한 부패행위 적발사례 - 공직자인 내부 신고자 보호방안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허위 또는 부정한 제보에 대한 처벌

5 신고·보호·보상 관련 양국 제도 비교

※ 호주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하 'PID법')가 각각 존재하는바, 아래 표는 연방 PID법을 기준으로 비교

	한 국	호 주
신고주체	· 누구든지	· 전·현직 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공공영역의 법 위반행위 ※ 민간영역은 「회사법」으로 규율
신고기관	· 기업,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공공단체 중 선택 가능	· 조직 내 신고 접수자 · 신고자의 상급자
신고자 보호방법	· 위원회 결정 통한 원상회복 등	· 법원 결정 통한 원상회복 등
지원제도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보상금,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 단, 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II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1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1 방문개요

- 1) 일 시 : 2022. 11. 14. (월) 10:00~11:30
- 2) 장 소 : 법무법인 H&H 사무실(시드니 소재)
- 3) 면 답 자 : 협회 회장 홍경일 변호사, 부회장 최희영 변호사
- 4) 연 락 처 : ken.hong@hhlaw.com.au / +61-02-9233-1411

2 토의 내용

㉠ 토의 요약

- 호주의 부패·공익신고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 주요 내용

- 호주의 공익신고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신고자도 전·현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한국제도와 차이가 있는바,
 -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회의록 : 붙임 1 참고

2 호주 연방법원

1 방문 및 기관 현황

㉠ 방문 개요

- 1) 일 시 : 2022. 11. 14. (월) 10:00~11:30
- 2) 장 소 : 호주 연방법원 사무실
- 3) 면 담 자 : Robert James Bromwich, Michael Andrew Wigney
Wendy Jane Abraham
- 4) 연 락 처 : Nichole.Cherry@fedcourt.gov.au.

㉡ 기관 개요

- 1) 설립 근거 : Federal Court of Australia Act 1976
- 3) 주요 기능 : 연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 분쟁 및 기소가능한 형사
쟁점 재판 등 관할

2 토의 내용

㉠ 토의 요약

- 신고자 보호결정의 합리성 못지않게 신속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바,
 - 행정관청이 아닌 사법기관(법원)이 결정하는 호주 공익신고 보호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합리성과 신속성을 어떻게 동시달성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 주요 내용

- **(신고주체)** 호주의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내부 신고창구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전·현직 관련자만 PID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
- **(보·포상제도)** PID법에서는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게 보상금(compensation, 한국의 구조금 성격)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고로 인한 국가 등의 수입 회복에 대응하는 보상금(reward, 한국의 보·포상금 성격) 제도 없음
 - ※ 호주 측 참석자들은 보·포상제도 부재에 대해 ‘신고행위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시민의 의무로 바라보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
- **(결정주체)** PID법에서의 보호, 보상결정은 행정기관이 아닌 연방 법원이 하며, 신고자의 민·형사상 책임감면은 각 주별 검찰총장이 결정함
- **(신속결정)**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법원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을 할 수 있으며,
 - 이는 상대측에 일방적 명령 신청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상대측의 반대 입장도 듣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므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위원회 시사점

-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을 활용하여 ‘先보호 後검토’ 취지에 맞는 신고자 보호제도 방안 모색

▣ 회의록 : 붙임 2 참고

3 호주 국세청

1 방문 및 기관 현황

㉠ 방문 개요

- 1) 일 시 : 2022. 11. 15. (화) 10:00~12:00
- 2) 장 소 : 호주 국세청 시드니 사무실
- 3) 면 답 자 : Luke OConor, Janine Clark, Tracey Backhouse
- 4) 연 락 처 : Natasha.modica@ato.gov.au / +61-02-937-40409

㉡ 기관 개요

- 1) 설립 근거 : Land Tax Act 1910
- 2) 주요 기능 : 호주 내 국세 수납 및 징수 등

2 토의 내용

㉠ 토의 요약

-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에 요구되는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는바,
 - 국세 관련 신고를 국세청이 접수·처리하는 호주 사례를 검토하여 신고처리의 전문성 및 신고자 보호기능의 작동여부 등 파악

㉡ 주요 내용

- (전문성 활용) 국세청이 국세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함에 따라

업무 연계성 및 활용성 강화

- 예컨대, 국세청은 조세 업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중대 신고와 마이너 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값을 바탕으로 신고처리 우선순위 결정
- (신고자 보호) 다만, 공익신고 전달기관이 아니므로 보호전담인력이 없고, 신고자 보호에 대해 비교적 수동적인 경향

☐ 위원회 시사점

- 호주 국세청의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신고의 중요도, 시급성에 따른 신고 분류체계 마련 필요

☐ 회의록 : 붙임 3 참고

4 호주 금융불만위원회(AFCA)

1 방문 및 기관 현황

☐ 방문 개요

- 1) 일 시 : 2022. 11. 17. (수) 10:00~12:00
- 2) 장 소 : 호주 AFCA 사무실(멜버른 소재)
- 3) 면 답 자 : Justin Untersteiner, Silvia Renda
- 4) 연 락 처 : srenda@afca.org.au / +61-03-8623-2035

나 기관 개요

- 1) 설립 근거 : Corporations Acts 2001
- 2) 주요 기능 : 호주 내 금융분야 민간기업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2 토의 내용

개 토의 요약

- 신고성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의 '공익신고'적 성격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이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
- 옴부즈만 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통해 민원 접수기관의 신고성 민원 처리 절차 벤치마킹

나 주요 내용

- (신고성 민원 대응) AFCA는 '시스템 이슈팀'을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며, 부패발생 개연성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포착하여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
- (사례관리) 민원(신고)처리는 개별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편차 클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를 위해 사례 도서관, 선도사례 공유, 데이터 큐브 등을 운영하고 있음

다 위원회 시사점

- 신고성 민원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신고 관리

라 **회의록** : 붙임 4 참고

5 호주 빅토리아주 부패방지위원회

1 방문 및 기관 현황

가 방문 개요

- 1) 일 시 : 2022. 11. 18. (목) 10:00 ~ 12:00
- 2) 장 소 : 호주 IBAC 사무실(멜버른 소재)
- 3) 면 담 자 : Stacey Killackey, Maria Cruz, Peter Morris 등
- 4) 연 락 처 : Maria.Cruz@ibac.vic.gov.au / +61-03-8635-6222

나 기관 개요

- 1) 설립 근거 :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11
- 2) 주요 기능 : 빅토리아주 내 공공분야 부패예방, 조사, 교육 등

2 토의 내용

가 토의 요약

- 빅토리아주 반부패기관의 조직, 관할, 수사권 등을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반부패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주요 내용

- IBAC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반부패총괄기관으로, 행정·입법·사법 전 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보유
 - 특히 중대 부패혐의에 있어서는 압수, 감청 등 검찰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실효적인 부패적발 가능
- 부패의 개념을 확대하여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부적절행위도 규제 하되, IBAC이 직접 조사하는 부패신고는 연 50건 내외로 유지하여 내실 있는 수사 진행

☐ 위원회 시사점

- 내실있는 부패방지기능 수행 위해선 반부패조직의 관할, 수사권 확대 필요

☐ 회의록 : 붙임 5 참고

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

1 방문 및 기관 현황

☐ 방문 개요

- 1) 일 시 : 2022. 11. 18. (금) 13:00~15:00
- 2) 장 소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실¹⁾

1) NSW주 옴부즈만과 ICAC는 같은 주정부의 기관으로 평시에도 상호 협력관계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방문편의를 위해 한 장소에서 두 기관과 토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해주었음

3) 면 답 자 : Louise Lazzarino, Matthew Thurbon, Holly Stewart

4) 연 락 처 : mriordan@ombo.nsw.gov.au / +61-02-9286-1030

나 기관 개요

1) 설립 근거 : Ombudsman Act 1974

2) 주요 기능 :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행정 관련 고충 처리 등

2 토의 내용

가 토의 요약

- 2023년 NSW주 PID(Public Interest Disclosure, 공익신고)법이 개정될 예정인바,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 및 취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나 주요 내용

- (PID법 개정사항) 신고접수주체, 신고주체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신고분야를 공공분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적용 시 신중할 필요
- (피해 사전예방)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처할 수 있는 위험·피해를 평가하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제적 보호조치 마련

다 위원회 시사점

- 사후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에서, 사전적 예방조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신고자 보호 정책방향 전환 필요

라 **회의록** : 붙임 6 참고

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1 방문 및 기관 현황

가 방문 개요

- 1) 일 시 : 2022. 11. 18. (금) 15:00~17:00
- 2) 장 소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실
- 3) 면 담 자 : Barry Davidow, Lewis Rangott
- 4) 연 락 처 : lrangott@icac.nsw.gov.au / +61-02-8281-5822

나 기관 개요

- 1) 설립 근거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 2) 주요 기능 :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공공분야 부패예방, 조사, 교육 등

2 토의 내용

가 토의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ICAC에서는 부패·공익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협조를 확보하는지 연구하고,
 - 익명신고, 對언론대응,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우리 위원회가

도입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취약한 제도에 대한 ICAC의 제도를 벤치마킹

나 주요 내용

- (기관협력) ICAC는 타 기관에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나, 반부패조직으로서의 권위, 간접적 압박 수단, 평시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해 타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ICAC는 2018년 11월 우리 위원회와도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MOU 이행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익명신고) ICAC는 익명신고가 무고의 가능성보다는 신빙성 있는 신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다만, 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 (대언론원칙) 부패·공익신고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경우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위원회 시사점

- ICAC의 對언론원칙이 위원회와 다소 상이한바, 양 기관의 원칙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라 회의록 : 붙임 7 참고

1 [신고 처리] 부패 · 공익신고의 對 언론 원칙 검토

㉠ 한국-호주의 對 언론 원칙 비교

- (한국) 신고가 언론에 공개되도 보호조치 가능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²⁾하고 끝낼 수 있으나,
 -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후*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 대상에 해당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는 ‘언론’이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등 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제보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호주) 언론에 공개된 제보에 대해서는 신고자 지위 불인정
 - 호주 PID법에서는 기관 내 공익신고 담당자 혹은 상급자에게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 구성요건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내부 제보 후 언론에 공개할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 예: 신분노출, 직무상 비밀누설혐의에 대한 기소 등

【참고】 데이비드 맥브라이드 사건

- 2016년 전직 법무관인 데이비드 맥브라이드(David McBride)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전·현직 호주 특수부대원들에 의한 민간인 및 죄수 살해 관련 비밀문서를 호주 방송사에 제보한 사건
- 이를 계기로 호주군의 본격적인 조사 시행되었으나, 맥브라이드 전 법무관은 직무상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 2020년 군 검찰총장 임명 특별조사관이 해당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 그러나, PID법에서는 내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는 내부 신고 없이 바로 언론에 제보하였기 때문에 PID법에 따른 책임감면 불가



나 언론에 공개된 신고에 대한 보호실익 검토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가 신고자 본인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으나,
-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1) 언론취재로 인해 신고자 비밀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2) 신고정보의 공개로 인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커져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3) 허위 신고* 등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대·재생산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언론공개 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호주의 방침도 참고할 필요 있음

* 허위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가목에 따라 신고자 보호 대상 배제

2 [신고자 보호] 일방적 금지명령 도입가능성 검토

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의 개념

- (정의) 일방이 금지명령 신청 시 상대측이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 (요건) ①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자가 왜 이 금지명령이 필요한지 및 필요하지 않은지를 모두 설명하면 ② 법원에서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인용결정시 이를 상대측에 통지하며, ③ 통지를 받은 상대측은 법원에 출석하여 왜 금지명령이 부적절한지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특징) 영미법 체계의 제도로, 확정적인 결정이 아니며 변경 가능

▣ 도입 시 기대효과 및 유의점

- (기대효과) 일방적 금지명령은 ‘先보호 後검토’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피신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행위를 철회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유의점) 사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일방적 금지명령을 도입함에 따른 실무상 한계, 피신고자의 자기변호권 침해 관련 법리 검토 등이 필요

3 [신고자 보상] 한국 보상제도의 적극적 대외홍보

▣ 한국-호주의 보상제도 비교

- (한국) 행정기관(위원회)에 의한 보·포상, 구조금 제도 운영
 - 위원회가 신고로 인한 국가 등의 수입회복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 (reward)할 수 있으며,
 - 신고로 인한 비용지출, 손해발생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 (호주)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명령만 가능
 - 신고로 인한 국가 등의 수입회복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자체가 없으며,
 -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명령 (compensation)만 내릴 수 있음
- ※ 호주 뿐 아니라 영국, 일본, 미국(공공부문) 등에도 reward 성격의 보상금제도 부존재

제도 홍보 제언

- 신고자 보상제도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 공고화
 - 행정기관이 신고자 보·포상,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국내·외로 관련 내용 전파하여 위원회 행정의 우수성 홍보
 - 보상제도 신규도입 검토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위원회 보상제도 전수
- ※ 최근 호주 집권정당이 교체됨에 따라 호주에서도 신고자 보상(reward)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미국의 선례를 위주로 검토 중

국민권익위원회 – 호주한인변호사협회 교류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4. (월) 09:00 ~ 12:00
- 장 소 : 법무법인 H&H 사무실(시드니 소재)
 - ※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홍경일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법인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홍경일 변호사, 최희영 변호사, 최단비 검사, 송종혁 검사

1 토의 개요

- 호주의 부패·공익신고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2 주요 내용 (연방 PID법 관련)

- (타법과의 관계) 연방 PID법은 연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정부도 각각 PID법을 가지고 있음
- (한국 법과의 비교)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행위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 호주의 PID법은 공공분야의 공익침해행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현직 공직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요건) 연방 PID법에서는 신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는 PID로 간주하지

않음

- 특히, 신고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는 신고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부정목적의 신고) 호주에는 무고죄가 없으므로 부정목적의 신고에 대해 무고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부정목적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PID법으로도 처벌 가능할 것
- (신고자 보호) PID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만 입증될 경우 사실상 모든 유형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가능
- (신고자 보상) 호주에서는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으며,
 -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compensation)하는 제도는 있음

③ 방문 사진



(왼쪽부터) 김혜진 사무관, 박희정 팀장, 홍경일 변호사, 최희영 변호사, 김인희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 호주연방법원 교류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4. (월) 14:00 ~ 16:00
- 장 소 : 호주 연방법원 사무실(시드니 소재)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호주연방법원) Robert James Bromwich, Michael Andrew Wigney Wendy Jane Abraham
 - (통역) 윤주희

1 토의 개요

- 신고자 보호결정의 합리성 못지않게 신속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바,
 - 행정관청이 아닌 사법기관(법원)이 결정하는 호주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합리성과 신속성을 어떻게 동시달성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호주의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내부 신고창구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전·현직 관련자만 PID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
- PID법에서는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게 보상금(compensation, 한국의 구조금 성격)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고로 인한

국가 등의 수입 회복에 대응하는 보상금(reward, 한국의 보·포상금 성격) 제도는 없음. 이는 신고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시민의 의무'로 바라보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임

- PID법에서의 보호, 보상결정은 행정기관이 아닌 연방법원이 하며, 신고자의 민·형사상 책임감면은 각 주별 검찰총장이 결정함
-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법원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을 할 수 있으며,
 - 이는 상대측에 일방적 명령 신청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상대측의 반대 입장도 듣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므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③ 질의 응답

□ 호주연방법원 측 참석자 소개

- Robert James Bromwich, Michael Andrew Wigney Wendy Jane Abraham은 모두 연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로, 현재는 민법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변호사로 근무 시에는 형법, 민법 등 다양한 재판사건에 관여한바 있음

□ 호주의 공익신고제도(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PID)

- PID 신고범위 및 신고자
 - PID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공직자 혹은 공공분야 종사자로 정해져 있으며, 민간인이 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PID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음

○ PID 접수기관

- 호주의 PID법은 공익신고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즉,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신고를 접수하는 제3의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공익신고 담당자, 혹은 상사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내부 신고가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익신고의 법적 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보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음
- 다만, 호주 사회도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만 신고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어왔으며, 내년 중순 쯤 연방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호주의 신고자 보호제도

○ PID로 인한 보복발생 시 대처

- 공익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할 경우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고,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임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 법원에 보호 조치금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피신고자에 대한 법적 배상이나 형사처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음

○ PID로 인한 직무상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피소된 경우

- 검사가 신고자를 직무상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으로 기소할 경우, PID 법을 통해 보복받을 수 있음. 다만, 요건이 까다로우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PID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호주의 책임감면 제도

- 호주의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여부는 각 주의 검찰총장이 결정하며, 민·형법상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

□ 호주의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제도 현황

- PID법에서는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compensation)을 해주지만, 한국처럼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의 일정비율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reward)제도는 없음
- 지난 10년간 포상금(reward)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적은 많았으며, 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 이는 신고행위에 대해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호주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됨

□ 보호결정의 신속성 확보

○ 보호관련 가처분 결정을 위한 요건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던가, 기타 응급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고자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가처분에 적용되는 공통된 요건임
- 첫 번째,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가처분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함

○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 소개

-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이란, 일방이 금지명령 신청 시 상대측이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함

(참고) 영미법 체계의 일방적 금지명령

• 법원의 일방적(Ex Parte) 금지명령(Injunctions)란?

- 일방적 금지명령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위협이 즉각적(Immediate)이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상대측에 일방적 명령 신청을 통보해 주지 않으며 상대측의 반대 입장을 듣지도 않고 처리된다. 일방적(Ex Parte)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편파적(One-sided)이란 의미가 있다.
- 일방적 금지명령은 보통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 일방적 금지명령 요청자는 현금 보석금(Monetary Bond) 지급

- 일방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긴급 영장(Emergency Warrants)을 발부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왜 필요한지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때, 금지명령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명령을 신청한 사실조차 알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 이 명령에 영향을 받는 대상 즉 피요청자(Affected Party)에게는 최소한도의 의무(Minimal Due Process)조차 따르지 않으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일종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일방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에, 그 명령이 부당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판사는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 피요청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일방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이런 때를 대비해 현금 보석금(Monetary Bond)을 지불해야 한다.

- 출처: 법스토리(<http://www.lawand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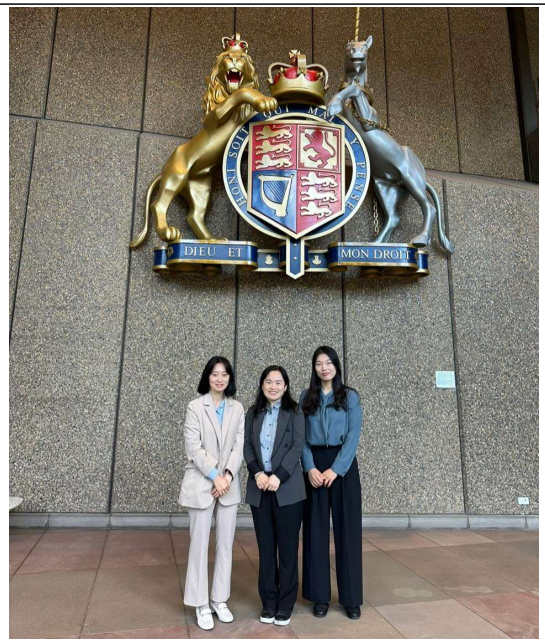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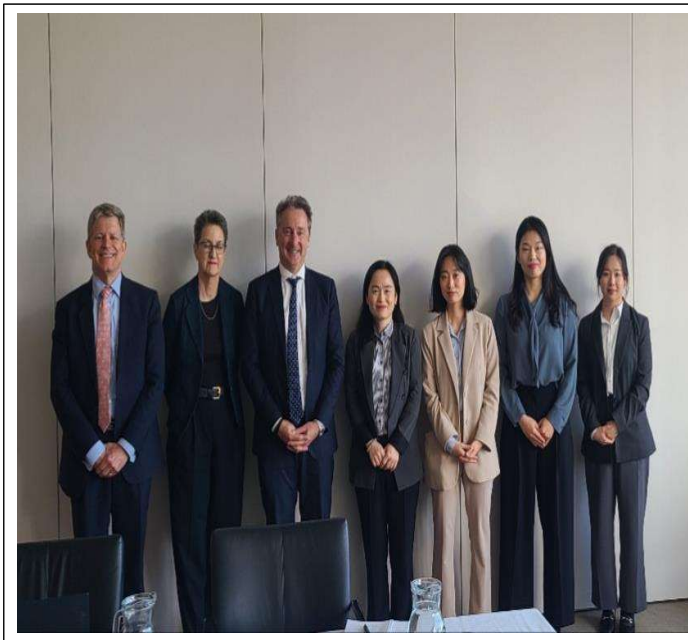
○ 일방적 금지명령을 위한 요건

- 첫 번째,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자가 왜 이 금지명령이 필요한지 및 필요하지 않은지를 모두 설명해야 함
- 두 번째, 법원에서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상대측에 알려주어야 함. 통지를 받은 상대측은 법원으로 출석하여 왜 금지명령이 부적절한지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일방적 금지명령은 확정적인 결정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음

○ 일방적 금지명령 결정의 의의

-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은 재판당사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당사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가처분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음.
- 예컨대, 호주 정부 이민국의 경우 추방대상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조짐을 보일 경우 추방결정을 재판 종료 전까지 보류하기도 함
- 이러한 가처분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Ⅳ 방문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 호주 국세청 교류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5. (화) 10:00 ~ 12:00
- 장 소 : 호주 국세청 시드니 사무실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호주 국세청) Luke OConor, Janine Clark, Tracey Backhouse, Minjae Lee
 - (통역) 김세린

① 토의 개요

-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에 요구되는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는바,
 - 특정분야(국세, 노동 등)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별도로 접수·처리하는 호주 사례를 검토하여 신고처리의 전문성 및 신고자 보호기능의 작동여부 등 파악

② 주요 내용

- 국세청이 국세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함에 따라 업무 연계성 및 활용성(예: 자체 알고리즘 통한 중대 신고-마이너 신고 구분) 강화
- 다만, 공익신고 전담기관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

③ 질의 응답

□ 부패방지 노력 관련 호주 최신동향

○ 연방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준비

-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방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내년쯤 설립될 것으로 예상

○ 호주의 공익신고 사례

- 최근 공익신고로는, 2016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호주군의 비인간적 행태를 고발한 McBride 사건이 있음

(참고) 데이비드 맥브라이드 사건

- 전직 법무관인 데이비드 맥브라이드(David McBride)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전·현직 호주 특수부대원들에 의한 민간인 및 죄수 살해 관련 비밀문서를 호주 방송사에 제보한 사건
- 맥브라이드 전 법무관의 신고를 계기로 계기로 호주군의 본격적인 조사 시행되었으나, 맥브라이드는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 2020년 군 검찰총장 임명 특별조사관이 해당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 국세청 소관 공익신고

○ 신고처리방법 및 신고 접수

- PID법 관련하여, 1년에 15~16건 정도의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
- 국세청이 통합 국세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신고유형은 현찰 거래를 통한 탈세신고임

○ 신고처리 기준

- 호주 국세청은 접수순으로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고사건부터 우선적으로 신고를 처리함
- 또한, 모든 신고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옆집사람이 현금거래 탈세를 했다고 신고된 건까지 모두 조사하진 않음.

- 이와 같은 신고 구분을 위해서는 신고 분류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중대 신고와 마이너 신고를 구분하고 있음 ※ 알고리즘 분류 기준은 【붙임】 참고
- 국세 관련 신고의 경우 옴부즈만을 통한 익명신고도 가능

○ 국세 관련 신고의 특이점

- 세무 공무원이 공익신고라는 명목으로 과세정보를 유출한다면 국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과세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엄격히 다뤄져야 함

○ 신고처리에 있어 타 기관과의 연계

- 국세 관련해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며, 조사를 신청하고 그 조사결과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 법적 절차의 중요성

- 신고자가 PID법에서 정해진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보할 경우 기소당할 수도 있음
- 위법을 폭로하는 공익신고가 정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공익신고는 예외 없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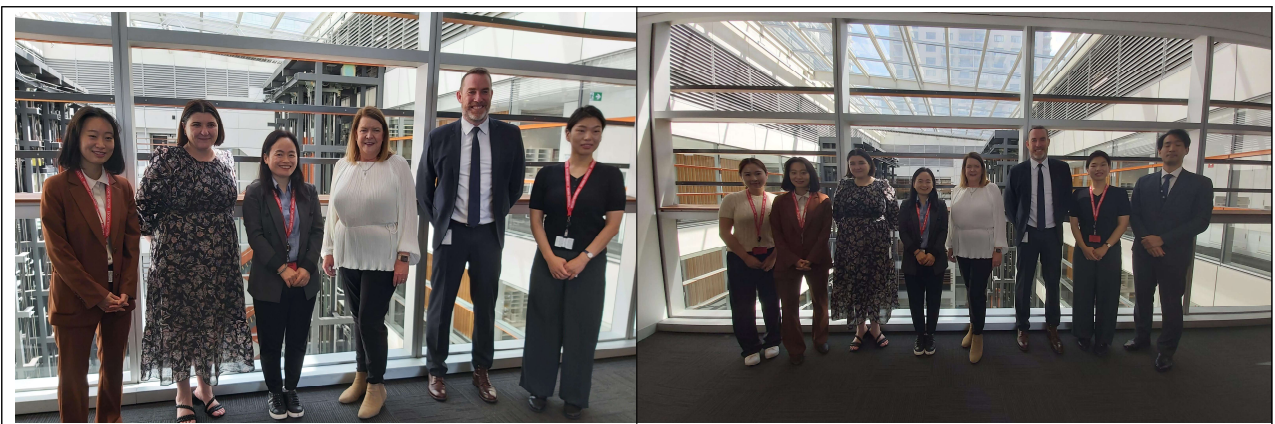
- 호주는 한국과 같은 공익신고자 보상제도가 없음

※ 호주에도 공익신고자 보상(compensation)이 있으나, 이는 신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에 한정된 성격으로, 우리나라 구조금과 유사

○ 신고자 책임감면

-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책임 감면이 가능함
- 법원에서 보호(책임감면 여부)결정을 할 경우, 신고자의 법 위반행위가 신고 이전에 있었는지 혹은 신고를 하면서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신고 이전 이미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감면을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책임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하게 접근하는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할 경우 책임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4 방문 사진



【 붙임 】 데이터 분석통한 분류 알고리즘(Consequence descriptors)

This table provides the base level descriptors for determining the consequence level of a risk.

Business lines are permitted to develop their own detail to support their ratings, so long as they meet the following headings.

	Insignificant	Medium	Major	Very
HEALTH AND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or first aid care with minimal impact on person's normal du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jury requiring < 1 week off normal du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jury requiring > 1 week off normal du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rious injury with effects hospitalisation incapacity/disability.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significant cost increase. Schedule slippage with insignificant delays in delivery. Insignificant impact on achievement of outcomes and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variance on expected costs. Schedule slippage causes minor delays that can be rectified. Minor impact on achievement of outcomes and performance. Requires additional management effort within the business area to control the 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0% variance on expected costs. Schedule slippage causes moderate to major delays. Impact on achievement of outcomes and performance. Requires additional management effort by business area. SES to control the 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25% variance on expected costs. Schedule slippage causes significant delays. Serious impact on achievement of outcomes and performance. Requires additional management effort by business area. SES to control the impact.
COMPLIANCE BEHAVI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ry few individuals, entities or groups are influenced by non-compliant behaviour, or do not receive appropriate entitl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w individuals, entities or groups are influenced by non-compliant behaviour, or do not receive appropriate entitl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me individuals, entities or groups are influenced by non-compliant behaviour, or do not receive appropriate entitl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y individuals, entities or groups are influenced by non-compliant behaviour, or do not receive appropriate entitlements.
REVENUE OR TRANSFERS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enue/transfers for the tax or super product are minimally impacted.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represents 0.002% or less of total ATO net revenue collection.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is up to \$7.93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enue/transfers for the tax or super product are moderately impacted.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represents between 0.002% and 0.02% of total ATO net revenue collections.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is from \$7.932m to \$79.32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enue/transfers for the tax or super product are substantially impacted.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represents between 0.02% and 0.2% of total ATO net revenue collections.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is from \$79.324m to \$793.2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enue/transfers for the tax or super product are severely impacted.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represents between 0.2% and 2% of total ATO net revenue collections. The revenue impact of the risk is from \$793.24m to \$7,932.4m

3) The percentages and amounts included for REVENUE OR TRANSFERS have been developed by the Client Engagement Group.

	Insignificant	Medium	Major	Very
ST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imal impact to our people and limited to local team. Staff with appropriate capacity and capability are avail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me impact to our people in more than one team within one line of business. Some skilled staff unavailable over the short term <1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me impact to our people in more than one line of business. Staff unavailable over the short to medium term >1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verse impact to our people in more than one line of business. Loss of staff over the month
PROP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ss or damage to assets or property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ss or damage to assets or property \$10,001 -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ss or damage to assets or property \$50,001 -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ss or damage to assets or property \$500,001 - \$2,000,000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significant impact on system/data security aspects of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or integ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or compromises to system/data security but sensitive and higher classified information remain secure and avail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system security is compromised and there is very limited loss of sensitive or classified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nd system security is compromised and there is significant loss of sensitive or classified information.
ICT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incident would be quickly detected and resolved through standard incident response procedures Minor impacts to services or systems, delays are unnoticeable by business or clients. Impacts are negligible; we will meet or exceed applicable availability targets. <p>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ill result in a Low (Priority4) severity incident causing minor levels of disruptions to services or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incident would not be quickly detected, or persists and requires greater time and effort to remediate, but would be constrained in the harm it can do to other systems or proliferation. Some impacts to services or systems and may result in some non-critical delays to business or clients. We will meet applicable availability targets. <p>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ill result in a Medium (Priority3) severity incident causing minor to moderate levels of disruptions to services or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incident would not be quickly detected, cannot be easily resolved, persists within a single system for an extended period or requires greater time, specialist skills and knowledge to resolve. Some ability to proliferate further, but generally expected to be detectable and can be constrained through additional measures. Moderate impacts to services or systems and may result in moderate delays to business or clients. We will not meet applicable availability targets. Will result in a High (Priority2) severity incident causing minor to moderate levels of disruptions to services or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incident would not be easily detectable. The incident persists for an extended period or requires greater time, specialist skills and knowledge to resolve. Significant impacts to services or systems and may result in significant delays to business or clients. We will not meet applicable availability targets. Will result in a Very High (Priority1) severity incident causing moderate to severe levels of disruptions to services or systems.
SCRUTI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rmal schedule of internal and external review with negligible areas for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ditional low level internal or external review with minor areas identified for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ditional low level internal or external review with some criticism and specific areas identified for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rehensive internal or external review with a high level of criticism and specific areas identified for improvement. Parliamentary

	Insignificant	Medium	Major	Very
REPUTATION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 adverse publicity Internal impact and no loss in public and stakeholder conf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ted adverse media attention and/or some short term damage in dealing with the public and stakehol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cal media attention and/or substantial short to medium term da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cal/ national media attention and/or medium to long term damage.
FRAUD & CORRU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lated minor instances of fraud by ATO officer (including manipulation of financial outcomes) that are less than \$10,000 No element of corruption or collusion Administrative action Issue dealt with by the manager/ATO External fraud resulting in financial loss less than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lated low to moderate level fraud by ATO officer (including manipulation of financial outcomes) that is between \$10,000 and \$50,000 No element of corruption Isolated instance of collusion Can be dealt with by ATO processes External fraud resulting in financial loss between \$200,000 and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ividual case of fraud by ATO officer (including manipulation of financial outcomes) that is between \$50,000 and \$100,000 Multiple cases of serious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ividual case of fraud by ATO officer (including manipulation of financial outcomes) that is between \$100,000 - \$1m Widespread internal or external corruption and/or collusion Significant or corruptly organised crime high level trust Significant collusion External fraud resulting in financial loss and \$200m

activities. Other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re the risk relates to broader ATO performance outcomes to be formed.

4) The impact of reputation is normally a secondary impact from other business risks materialising. Before focussing on a risk event and consequences which may influence public opinion and the ATO's reputation.

Serious fraud is defined as an offence resulting in 2 or more years in imprisonment

Likelihood descriptors

This table is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a risk.

Likelihood	Description
Rare	<p>The risk will only occu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p> <p>There is a high level of justifiable certainty that the risk will not be realised.</p> <p>There is a less than 10% chance that the risk will occur in the life of the plan, project or activity being assessed.</p>
Unlikely	<p>The risk is unlikely to occur.</p> <p>Whilst there is a credible possibility that the risk may occur, it is unlikely.</p> <p>There is a 10-40% chance that the risk will occur in the life of the plan, project or activity being assessed.</p>
Even Chance	<p>It is possible for the risk to eventuate.</p> <p>There is a reasonable probability that the risk could occur.</p> <p>There is a 40-60% chance that the risk will occur in the life of the plan, project or activity being assessed.</p>
Likely	<p>The risk is likely to occur.</p> <p>Whilst there may not be certainty that the risk will occur, all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risk has a high probability of eventuating.</p> <p>There is a 60-90% chance that the risk will occur in the life of the plan, project or activity being assessed.</p>
Almost Certain	<p>The risk is expected to occur.</p> <p>There is a high level of certainty that the event will occur.</p> <p>There is a greater than 90% chance that the risk will occur in the life of the plan, project or activity being assessed.</p>

Note: Population or frequency aspects are no longer represented as these are considered as key risk indicators (KRI's) rather than a direct measure of likelihood, and are mainly relevant to the Compliance Engagement Group (CEG) risks. Population or frequency aspects do not translate consistently easily across all business lines and areas using these KRIs are best placed to determine how they impact upon their level of risk.

ATO risk matrix

The Risk matrix is used during the risk assessment process to determine the level of a risk. A risk rating is based upon the consequences and likelihood of an event occurring. There are six defined levels of risk: low, moderate, significant, high, severe and catastrophic as shown below.

Consequence	Extreme	High	High	Severe	Severe	Catastrophic
	Very High	Significant	Significant	High	Severe	Severe
	Major	Moderate	Significant	Significant	High	High
	Medium	Low	Moderate	Significant	Significant	Significant
	Insignificant	Low	Low	Moderate	Moderate	Moderate
		Rare	Unlikely	Even Chance	Likely	Almost Certain
		Likelihood				

1)
2)

국민권익위원회 - AFCA* 교류회의 회의록

* AFCA(Australia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 호주 금융 분야 민원 등을 처리하는 ombudsman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6. (수) 10:00 ~ 12:00
- 장 소 : 호주 AFCA 사무실(멜버른 소재)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AFCA) Justin Untersteiner(chief operating officer), Silvia Renda(Chief Adviser and Head of Government Relations)
 - (통역) 안지영

① 토의 개요

- 신고성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의 '공익신고'적 성격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련 조치(신고자 비공개, 유관기관 조사 등)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이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

- ombudsman 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통해 민원 접수기관의 신고성 민원 처리 절차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AFCA는 금융사들을 회원사로 하는 금융민원 전문 ombudsman으로, 회원사들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민원(신고)처리는 개별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를 위해 사례 도서관, 선도사례 공유, 데이터 큐브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신고성 민원 대응 관련, AFCA는 '시스템 이슈팀'을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며, 부패발생 개연성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포착하여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

③ 질의 응답

□ AFCA 조직 소개

○ 참석자 소개

- Justin Untersteiner는 CF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 영업관리자)로, 법인서비스, 재정, 금융 관리, 민원 관리 등 업무 수행
- Silvia Renda는 총괄 어드바이저(Chief Adviser and Head of Government Relations)로, 옴부즈만 CEO에 대한 자문 업무 담당

○ AFCA 개요

- 금융 서비스는 호주 경제에 8퍼센트 차지하며 호주에는 96개의 은행이 있음. 이러한 금융사들이 호주 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AFCA에 가입하여야 함. AFCA는 이들(은행, 카드회사 등)의 기금 지원이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
- AFCA는 2018년에 3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생겼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함

○ AFCA의 업무

- AFCA는 법원 재판의 대체재라고 볼 수 있으며, AFCA가 관할하는

영역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AFCA는 금융회사 관련 민원(complaint)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회원사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 만약 그 회원사가 AFCA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회원사는 우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됨
- 다만, AFCA 결정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AFCA의 배상금액 등 결정에 불만족할 시 소비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음부즈만 조직의 자체 자정노력

- AFCA는 각 금융사들과의 계약을 통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만약 AFCA가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AFCA를 고발할 수 있음(AFCA도 같은 이유로 금융사를 고발할 수 있음). 다만, 금융회사들이 AFCA를 고발할 수 있는 고발요건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음
- 또한 AFCA는 내부검토 제도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면 내부검토팀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까지 함

□ AFCA의 민원처리

○ AFCA의 민원처리 통계

- AFCA는 매년 7천여 개 정도의 불만을 접수 받으며, 이중 60%는 은행, 금융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사, 연금, 투자사, 생명보험 분야 등에 관한 것임
- AFCA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은 신용사(카드)와 관련된 것이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skim) 관련해서도 은행이 적절한

보안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민원처리 절차

- 신청인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 민원의 77%는 온라인, 4%는 전화, 나머지는 이메일이나 서신으로 이뤄지고 있음
- 민원이 접수되면 AFCA가 해당 금융사에게 자체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의하고(처리기한 21일 ~ 45일), 금융사의 자체 해결의지가 없으면 AFCA가 직접 조사함
- 참고로, 소비자가 AFCA에 제기할 수 있는 민원대상금액의 최대 금액과 AFCA가 회원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차이가 있음.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이유는, AFCA가 법원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관련 소액분쟁에 있어서는 AFC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되, 배상금액이 커질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상명령 금액 한도보다 낮은 금액에 대한 청구가 이뤄짐

○ 민원처리 결과

- 접수민원의 70% 정도가 협상이나 화해를 거쳐서 해결이 되고 5천여 건 정도가 공식적인 AFCA 결정을 통해서 종결됨
- 작년 기준 약 20억 7백만 달러 상당 분쟁이 AFCA를 통해(협상, 화해, AFCA 결정 등 포함) 해결되었음
- 다만 모든 분쟁이 금전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사과나 금융사의 정책변경으로도 이뤄질 수 있음

□ 민원처리와 공익신고

○ 민원내용에 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처리방식

- 금융사에 대한 문제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케이스 매니저들이 해당 사안을 시스템 이슈팀(systemic issue team)에게 보내는 동시에, ASIC(Australia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 2021-22 시스템 이슈 통계 (AFCA 연간 보고서 발췌) 】



※ 추가적인 시스템 이슈 관련 내용(연간보고서 내용)은 【붙임】 참고

- AFCA는 규제기관이 아니므로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민간 회사를 직접 고발하진 않으며, 규제당국인 ASIC가 금융사를 고발할 수 있음

○ 부패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AFCA의 노력

- 민원의 기본 해결원칙은 사안별 접근임. 그러나, 민원 처리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구조적 한계를 발견할 경우 시스템적 오류(systemic error)로 보고 별도로 다룰 수도 있음
- 특히, 이러한 오류가 부패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경우 ASIC,

호주 국세청, 호주 건전성 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등에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업무 효율화를 위한 AFCA의 노력

○ 민원처리 품질유지를 위한 주요사례 데이터화

- AFCA의 민원처리는 개별 매니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간 개인적 편차를 없애고 민원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한 사례 도서관(case library)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사례(leading decisions, 사법기관의 ‘판례’와 유사)를 정해서 공유하고 있음

○ IT 기술의 도입

- AFCA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1) 데이터 큐브(data cube), (2) 대쉬 보드(dash board)를 도입하였음
- 데이터 큐브(data cube)란, 회원사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로, 각 금융회사 별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특정 금융사가 4건 이상의 민원을 받으면 데이터 큐브에 해당 사실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금융사들이 민원을 관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음
- 대쉬 보드(dash board)란 회원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으로, 여기에는 회원사들의 정보와 실적을 올려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쉬 보드는 회원사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을 줄이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함

4 방문 사진



Systemic issues

In addition to AFCA's remit to resolve individual complaints, AFCA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broader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We have an obligation to identify and report systemic issues, serious contraventions of the law and other reportable matters set out under section 1052E of the Corporations Act to regulators, including ASIC, APRA and the ATO.

This is a long-established design feature of Australian external dispute resolution schemes. The requirement is set out in ASIC's Regulatory Guide (RG) 267, and it forms part of AFCA's authority to operate. AFCA has been meeting this requirement since its inception.

Our role in identifying and reporting systemic issues benefits consumers who have not lodged a complaint with AFCA but who may, nonetheless, have been impacted by a systemic issue identified through our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nsumer complaints.

With the introduction of RG271 in October 2021, financial firms have enforceable obligations to manage systemic issues identified through consumer complaints. AFCA's role sits alongside this and assists member firms to identify possible systemic issues, so they can quickly put in place a program to rectify the issue and remediate consumer harm; thereby, reducing consumer complaints flowing through to external dispute resolution.

Transformation

The transformation of AFCA's systemic issues function is a strategic focus for AFCA and our Board.

There are two Independent Review recommendations relating to AFCA's systemic issues function. The transformation project will respond t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1. Recommendation 12, which relates to AFCA clarifying its systemic issues role compared to that of regulators.
2. Recommendation 13, which relates to AFCA increasing transparency of its systemic issues work through public reporting.

Key objectives of the transformation are:

- We are world-class leaders in the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systemic issues, leveraging data and analytics for early detection and efficient investigation.
- The role of the systemic issues function is recognised and clearly understood by key stakeholders. It is supported by consistent and transparent processes, allowing for effective, timely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of systemic issues.
- Our engagement with regulators, consumer advocates and members is proactive and collaborative, with sophisticated technology to seamlessly share data and valuable insights in real time.
- Our people have the right tools, resources and capability to apply judgment and critical thinking to resolve systemic issues supporting an enhanced experience for our members and stakeholders.

Impact of AFCA's systemic issues work

Our systemic issues work has achieved great results this financial year.

In 2021–2022, AFCA conducted 153 detailed systemic issues investigations and resolved 46 systemic issues investigations with financial firms. This resulted in \$18,275,607 in financial remediation to 167,033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Other consumer outcomes included the reinstatement of incorrectly cancelled general and life insurance policies, and the rectification of credit and repayment history information on consumer credit reports.

In addition, AFCA reported 23 reportable matters to regulators over the year, 19 of which related to financial firms refusing or failing to give effect to AFCA determinations and one related to a serious contravention of the law.

Between 1 July 2021 and 30 June 2022, AFCA:

- identified and investigation of systemic issues resulting in the remediation to 167,033 consumers
- ensured \$18,275,607 in refunds were made to consumers
- identified over 993 potential systemic issues
- referred 153 systemic issue investigations to financial firms
- reported 67 systemic issues to regulators
- resolved 46 systemic issues investigations with financial firms

¹ One of the reports related to ACBF and multiple failures by th



Case study

- Consumers impacted – 714
- Financial remediation – \$51,597
- Financial firm had 65 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 complaints about this issue, but had not identified it as a systemic issue.

AFCA identified a concern that a financial firm was not offering travel insurance policy holders a premium refund or credit during a period when their travel insurance would not have provided cover due to COVID-19 travel cancellations.

The complaint on which AFCA identified the issue related to an overseas trip planned from 18 March 2020 to 10 April 2020, where the return airline tickets had been cancelled by the airline provider. The policy holder made a claim that was declined by the insurer under a 'pandemic or other epidemic break-outs' exclusion in the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AFCA identified seven other consumer complaints that raised the same issue.

AFCA engaged with the financial firm to clarify how it had been handling claims made relating to cancelled travel during COVID-19. It was AFCA's published view at the time that a premium refund was a fair outcome if an insurer was entitled to deny a policy holder's travel-related claim based on a blanket pandemic-related exclus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financial firm worked with AFCA and identified many consumers who had not been offered a premium refund following claim denials, due to the application of pandemic-related exclusions. It had also dealt with 65 internal 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about this issue.

AFCA assessed a definite systemic issue. The financial firm implemented a small remediation program in April 2022 to address the issue and this program was completed in June 2022.

Case studies are used to demonstrate AFCA's approach to an issue and have been simplified for length and clarity.

Case study

- Customers impacted – 17,285
- Financial remediation – \$11,658,333
- Financial firm identified systemic issue following AFCA determination and breach reported to ASIC.

AFCA identified an issue with the way in which a financial firm was applying and factoring premium policy discounts, alongside premium re-pricing for its life insurance policies.

The complaint on which AFCA identified the issue related to a complainant who had taken out a level premium life insurance policy with the insurer. The complainant brought the complaint to AFCA due to concerns that the insurer appeared to have removed discounts and unreasonably increased the premium. AFCA identified eight other consumer complaints that raised the same issue.

Case study

- Customers impacted – 2,542
- Financial remediation – \$130,000
- A systemic issue relating to a failure of process.

AFCA identified concern with the way a financial firm reported credit information to credit reporting bodies. The financial firm was reporting closed accounts as 'open' in certain circumstances and this resulted in incorrect default listings, including where a consumer's debt had been waived on compassionate grounds. There was also an issue of delay in the financial firm correcting credit reports once a customer complained of incorrect information on their credit file.

The complaint that led AFCA to identify the issue related to the complainant's request to the credit-reporting body to update incorrect information on their credit file. The credit-reporting body advised that it had not received a request from the financial firm. AFCA identified seven other consumer complaints that raised the same issue.

AFCA engaged with the financial firm about the issue. Through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financial firm identified the main cause of the issue. Its staff were skipping a step in the process and failing to input a 'close date' when closing a customer's account. This failure meant that incorrect, or inaccurate, information passed onto the downstream automatic credit-reporting activity, which passed on information to credit-reporting bod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financial firm confirmed that it had identified 2,542 impacted consumer credit files. AFCA assessed this as a definite systemic issue on that basis, and it reported the systemic issue to ASIC and the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financial firm undertook several actions to rectify the systemic issue, including:

- correcting 2,542 impacted customer credit files
- updating its system to classify certain fields, such as making the 'close date' a mandatory field
- introducing an additional check control prior to informing credit reporting bureaus
- providing additional coaching and feedback to relevant staff
- introducing new processes to reduce time rectifying incorrect information on credit files.

Case studies are used to demonstrate AFCA's approach to an issue and have been simplified for length and clarity.



국민권익위원회 – 호주 IBAC 교류회의 회의록

* IBAC(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 호주 빅토리아주의 부패방지위원회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4. (수) 10:00 ~ 12:00
- 장 소 : 호주 IBAC 사무실(멜버른 소재)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호주 IBAC) Stacey Killackey, Maria Cruz, Peter Morris 등

① 토의 개요

- 빅토리아주 반부패기관의 조직, 관할, 수사권 등을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반부패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②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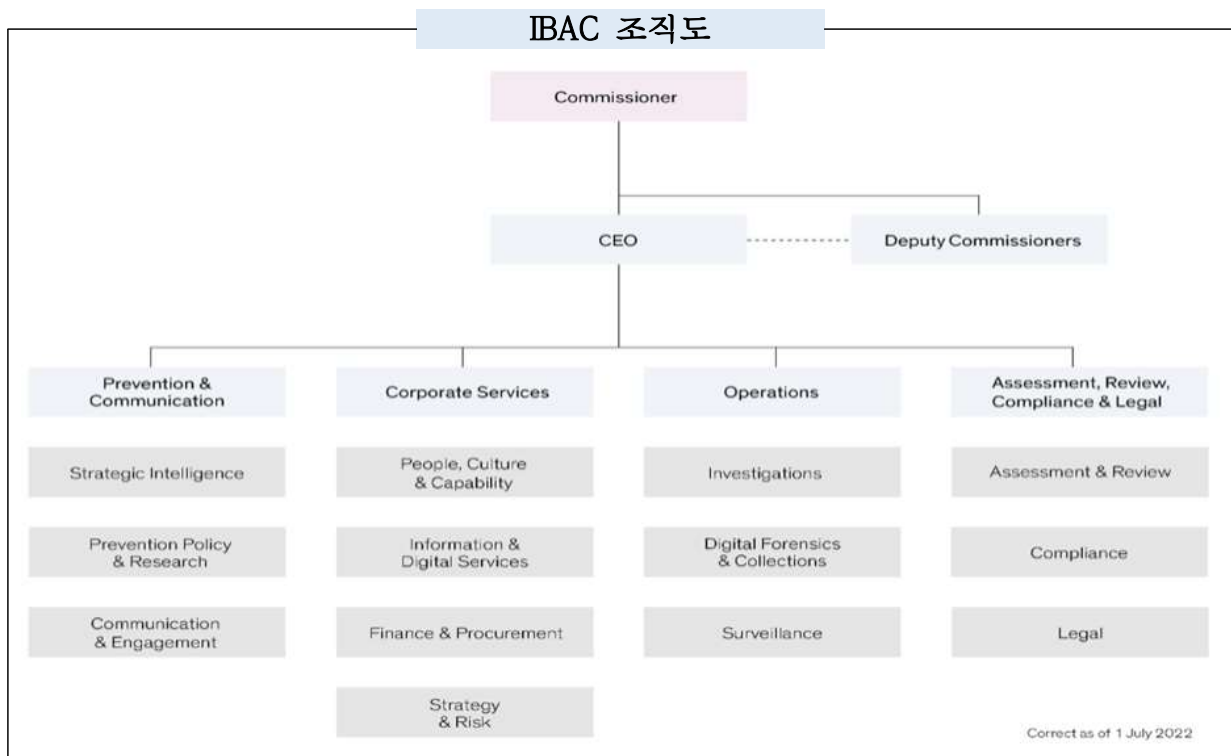
- IBAC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반부패총괄기관으로, 행정·입법·사법 전 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보유
 - 특히 중대 부패혐의에 있어서는 압수, 감청 등 검찰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실효적인 부패적발 가능
- 부패의 개념을 확대하여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부적절행위도 규제 하되, IBAC가 직접 조사하는 부패신고는 연 50건 내외로 유지하여 내실 있는 수사 진행

③ 질의 응답

□ IBAC 소개

○ IBAC 조직

- IBAC는 크게 ①Prevention&Communication, ②Corporate Services, ③ Operations, ④ Assessment, Review, Compliance & Legal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패예방(prevention) 업무 시 대외소통을 통한 메시지 전달(Communication)도 중요하게 생각함



○ IBAC의 관할 및 권한

- IBAC는 반부패 기능 관련해서 주정부기관(행정부) 뿐 아니라 지방의회(입법부), 사법부(판사 등)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수사를 위해 물건 등을 압수하거나, 부패혐의자의 통화를 도청할 수 있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강제권한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고 있음

○ 다른 주정부기관과의 협력

- 빅토리아주 내 청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정부기관은 IBAC, 옴부즈만, 감사 사무소(VAGO, Victorian Auditor-General's Office) 등이 있으며, 필요시 상호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개념

○ 부패신고(Report corruption), 부정행위 신고(report misconduct), 공익신고(public interest disclosure)의 구분

- 부정행위 신고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 등 민원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부패행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음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또한 개념이 유사하나, 공익신고는 법 위반 행위신고에 보다 가까움. 예컨대, 해외 파견부대가 현지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면 부패행위라기보다 공익침해행위에 가까울 것임
- IBAC는 등록된 신고 등의 성격을 평가(assessment)하여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의 이송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음

※ IBAC의 평가(assessment)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접수) 기능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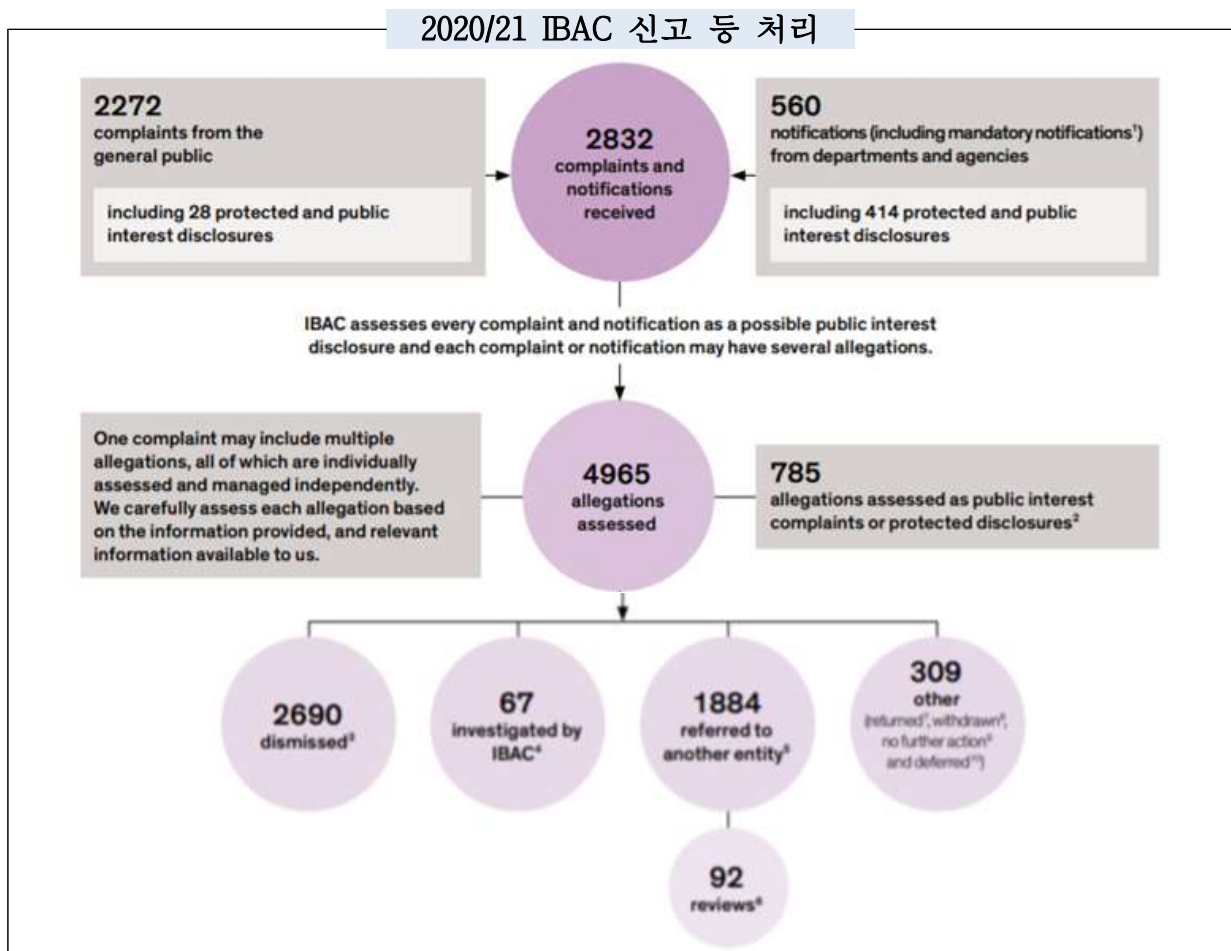
○ 주로 접수되는 부패신고 유형

- 전형적인 부패유형으로는 위법한 영향력 행사, 보조금 지급 및 수령 관련 부정행위, 뇌물수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이 있음
- 부패행위는 공직자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민간이 주체인 행위, 예컨대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 등을 고의적으로 부정수령하는 것 또한 부패행위에 해당함
- IBAC는 부패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부패·공익신고의 처리

○ 신고접수현황

- 2020/21 시즌 IBAC에 2,832개의 신고 등(allegation)이 등록되었고, 한 신고에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접수함에 따라 총 4,965건이 접수되었음
- 이 중 IBAC가 직접 조사한 건은 47건이고 그 외에는 종결(2,690건)되거나 타 기관으로 송부(1,884건), 취하, 철회 등(기타, 309건) 방식으로 처리되었음



○ 신고 처리 기법

- IBAC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경찰 출신 조사관들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음

4 방문 사진



(왼쪽부터) Stacey Killackey(Executive Director, Legal, Assessment & Review and Compliance), Maria Cruz(Senior Engagement Officer), 김인희 사무관, 김혜진 사무관, Alister McCulloch(Manager Prevention Policy & Research), 박희정 팀장, Sue Kapourelakos(Director, Assessment & Review), Peter Morris(Executive Director, Operations), Grace Hwang(Lawyer, Legal Operations), Fleur Taylor, (Director Public Law, Policy and Oversight)

IBAC 소개

www.ibac.vic.gov.au

Korean

여러분은 공공부문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개인적 이해, 탐욕 혹은 범죄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IBAC는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개인의 삶에 해를 가하는 부패 혹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BAC는 빅토리아주의 부패 방지 기관입니다

IBAC의 비전은 적극적으로 부정부패를 타파하는 공공부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및 공공 기관에서의 부정행위 포함) 에 대한 통지 및 불만제기 접수
2. 부패 및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드러내며 심각하고 조직적인 사안들에 우선순위 부여
3. 공공부문, 경찰 및 지역사회에 부패 및 부정행위의 위험과 영향 그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 제공.

1. 부정 부패 보고

IBAC는 매년 공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에 대해 약 5000 건의 진술을 접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패를 드러내는데 있어 그리고 공공부문 전 분야의 현재 동향 및 위험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IBAC는 본 기관의 연구 상황과 기타 다른 불만제기들 그리고 기밀 자료들과 함께 각 불만 제기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점검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불만제기를 타기관으로 의뢰 가령, 빅토리아주 옴부즈먼 (Victorian Ombudsman), 빅토리아주 경찰 (Victoria Police), 혹은 불만제기가 관여된 기관 등 IBAC는 종종 이들 사안의 결과를 검토하여 철저하게 조사되고 적절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직접 불만제기 조사 IBAC는 이 결정 제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차후 조치 없음.

IBAC의 관할권 - 빅토리아주의 공공부문



주정부

- 관계 기관
- 관계 부처
- 공립 의료 서비스
- 학교
- TAFE 및 대학교



시의회

- 시의원
- 시의회 직원



빅토리아주 경찰

- 정식 경찰관
- 보호 서비스 경찰관 (PSO)
- 신임 경찰관
- 구류담당 경찰관
- 직원



주의회

- 의원
- 선거구 담당관
- 각료 직원



사법부

- 판사, 법관 및 기타 사법기관 구성원들:
- 고등법원 (Supreme Court)
- 지방법원 (County Court)
- 검시관 법원 (Coroners Court)
-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 (VCAT)

ibac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Victoria

공공부문 부패란?

부정부패는 공공부문 직원이 부정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계약을 제공하거나 비밀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 혹은 누설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정행위란?

공공기관의 부정행위는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위임된 권한 수행 혹은 의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혹은 전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부정행위란?

IBAC는 또한 빅토리아주 경찰관의 더 광범위한 부정행위에 대한 불만제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식 경찰관, 신임 경찰관, 직원 및 보호 서비스 경찰 (PSO) 들을 포함합니다.

부정행위는 경찰 직원의 불패한 물건 유포, 음주운전, 근무일지/등록부에 거짓 기록 혹은 공권력 남용 등을 포함합니다.

2. 부정부패 조사

법률에 따라 IBAC는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공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의 진술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IBAC는 불만제기 혹은 통보를 조사하거나 '기관이 발의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은 부패 혹은 경찰 인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범죄 기소 혹은 차후 조치 권장은 가능한 결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기관은 또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제재를 권장하거나 개선 사항을 수행합니다.

검사 수행

검사는 IBAC의 조사 절차의 일환이며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수행됩니다. 본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할 경우 공청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 예외적인 상황
- 공익에 부합
- 개인의 명예나 안전 혹은 복지에 부적절한 해를 초래하지 않고 열릴 수 있을 경우.

IBAC 권한의 적절한 집행

조사 기간 동안에 IBAC에 의해 아래 사항 수행 가능:

- 문서 및 기타 사항 작성 주도
- 건물 진입 및 수색, 문서 및 물건 압수
- 감시 고안물 이용, 전화 통화 인터셉트
- 사적 및 공적 검사 수행
- 공청회에서 사람들이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

본 기관은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수행하기 이전에 법정 (court) 및 재판소 (tribunal) 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기관은 본 기관의 권한 사용에 대해 주 및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3. 부정부패 방지

본 기관은 공공부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적 자금이 의도한 대로 소비되도록 할 책임을 가지며 모든 빅토리아 주민들을 위해 중요한 정부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공공부문 부패 및 심각한 부정행위의 방지는 IBAC의 우선순위 사항이며 본 기관 전체가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빅토리아주 체제 전역의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IBAC는 아래 사항 수행을 위해 포괄적 범위의 방지 개입을 고안하고 제공하며 평가합니다.

- 개인이 부패 및 심각한 부정행위를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권한 부여
- 부패 및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기관 지원
-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패 방지 문화 창출을 위한 사회적 규범 강화.

부정부패의 영향력 이해

착취 혹은 부패의 가장 취약 지점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본 기관은 주요 동향 및 사안에 대해 그리고 시스템과 업무의 개선을 위한 기회를 강조하는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 전략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연구는 본 기관의 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 사항을 위해 사용됩니다.

- 부정부패 및 그 유해함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공공 부문에 참여
- 부정부패 신고를 향상하고 신고를 다루는 공공부문의 역량을 구축
- 기관들이 부패 위험에 대비하도록 최근 정보 및 기밀로 경각심 제공.

Level 1 North Tower
459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GPO Box 24234
Melbourne VIC 3001

T 1300 735 135
F (03) 8635 6444

2017년 1월

IBAC는 빅토리아주의 부패방지 기관으로서 공공부문 부패 및 경찰 부정행위 예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각한 부패 및 경찰 부정행위 조사
- 부패 및 경찰 부정행위의 위험 및 영향, 그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공공부문, 경찰 및 지역사회에 통지.

부정 부패 신고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www.ibac.vic.gov.au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300 735 135**에 연락하십시오.

통번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서비스에 **13 14 50** 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ibac.vic.gov.au/general/accessibility/tr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NSW주 옴부즈만 교류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8. (금) 13:00 ~ 15:00

○ 장 소 : 호주 NSW주 ICAC 사무실(시드니 소재)

※ 위원회는 각 기관에 별도로 회의요청을 하였으나 양 기관(NSW주 옴부즈만, ICAC)은 평시에 업무상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기관들로 상호 협의하에 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호주 NSW주 옴부즈만) Louise Lazzarino, Matthew Thurbon, Holly Stewart
- (통역) 김대영

1 토의 개요

- 2023년 NSW주 PID(Public Interest Disclosure, 공익신고)법이 개정될 예정인바,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 및 취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2 주요 내용

- PID법은 신고접수주체, 신고주체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신고분야를 공공분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적용 시 신중할 필요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처할 수 있는 위험·피해를 신고접수기관이 미리 점검하는 것은 유의미한 사전예방수단으로 보이는바, 벤치마킹 검토 필요

③ 질의 응답

□ NSW주 옴부즈만의 역할

○ PID 관련 옴부즈만의 역할

- 옴부즈만은 신고를 직접 접수·처리하기보다, 신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고자가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옴부즈만은 정부기관이 어떻게 PID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예컨대, 특정 기관이 PID를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 연례보고를 하면, 옴부즈만은 실제로 그러한지 해당 기관을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정책수단

- 옴부즈만은 각 기관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다만 권고만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권고는 단순 권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고 후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사실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있음

□ NSW주 PID법과 한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차이

○ 민간 분야 관련 신고

-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신고도 공익침해행위로 접수하고 있으나, NSW주 PID법에서는 신고대상을 공공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 호주 민간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회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소관기관은 ASIC(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임

○ 보상제도 부재

- NSW주 PID법에는 신고에 따른 보상금제도가 없으며, 신고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 금전적 보상의 대상은 아님

○ 의무신고와 재량신고

- NSW주 PID법에서는 PID를 의무신고(mandatory PID)와 재량신고(voluntary PID)로 구분하고 있음

□ NSW주 PID법 개정

○ PID법 개정 취지

- 개정 PID법은 20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내부 신고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개정사항

- 기존에는 직장 내 PID 담당자로 정해진 사람에게만 내부신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 법에서는 직장 상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기관의 계약직 직원들도 PID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음
- 각 기관은 PID를 접수했을 때, PID 신고 접수 후 신고를 중단하고자 할 때 해당 사실을 옴부즈만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 기존에는 공무원만 PID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일반인이 PID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

- PID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자에게 신고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하며, 신고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현재 옴부즈만에서 평가 기준 지침을 수립 중에 있음

4 방문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 호주 ICAC 교류회의 회의록

*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의 부패방지위원회

< 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11. 18. (금) 13:00 ~ 15:00
- 장 소 : 호주 NSW주 ICAC 사무실(시드니 소재)
- 참 석
 - (국민권익위) 박희정(공익심사팀 팀장), 김인희(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김혜진(신고자보상과 사무관)
 - (호주 ICAC) Barry Davidow, Lewis Rangott
 - (통역) 김대영

① 토의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ICAC에서는 부패·공익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협조를 확보하는지 연구하고,
 - 익명신고, 對언론대응,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우리 위원회가 도입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취약한 제도에 대한 ICAC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ICAC는 타 기관에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나,
 - 반부패조직으로서의 권위, 간접적 압박 수단, 평시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해 타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ICAC는 익명신고가 무고의 가능성보다는 신빙성 있는 신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다만, 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 부패·공익신고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경우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

③ 질의 응답

□ ICAC 소개

- ICAC의 권한과 정책수단
 - ICAC는 타 기관에 특정행위를 명령할 강제권이 없고, 주로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고 있음
 - 주요 정책수단은 권고, 조언, 추천 등이며, 주로 조사 보고서에 의거해서 권고하는 경우 많음. ICAC가 권고한 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ICAC가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기관도 ICAC의 권고를 쉽게 무시하지는 못하며, 조사 과정에서 기관장을 출석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권고 수용률이 높은 편임
- ICAC와 옴부즈만 역할의 차이
 - ICAC는 부패행위(corruption)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옴부즈만은 공사구분 못하는 행위(misconduct)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음. 물론 부패행위와 공사구분 못하는 행위 간에는 중복되는 경

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ICAC와 옴부즈만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협력

- ICAC는 경찰, 옴부즈만 등 다양한 기관과 공식·비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아닌 다른 주의 기관, 혹은 연방정부, 지방정부와도 협력함

□ ICAC와 부패·공익신고

○ 부패·공익신고의 동기

-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즉, 훌륭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인은 본인의 직장이 부정부패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임. 물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자의 시민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 ICAC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평가팀(assessment team)에서 조사할지 여부 등을 먼저 결정하고, 조사결정된 신고 건은 관련 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처리함

※ 평가(assessment)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접수절차(접수 또는 일반신고 종결 여부 결정)과 유사

○ 익명신고

- 일반적으로 익명신고가 신고의 정확성이나 신빙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ICAC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음

-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신고자가 조직 내 배신자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익명신고를 독려하는 편임
- 다만,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경우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신고를 찾아내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임. 그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임

○ 부패·공익신고와 언론

- PID법에 따르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신고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며, 이는 ICAC뿐만 아니라 신고자도 마찬가지임
- 신고자가 소속기관이나 ICAC와 같은 반부패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피신고자의 권리

- ICAC의 기본원칙은 신고 관련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도 비공개임
- 법적으로 피신고자는 신고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수 기회를 보장받으며, 조사 결과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경우에는 징계가 타당한지 소속기관장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 피신고자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독립 심사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조사 결과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결과 보고서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피신고자를 보호함

4 방문 사진

